

상반기 백신 1차접종 목표 1300만명 돌파... 집단면역 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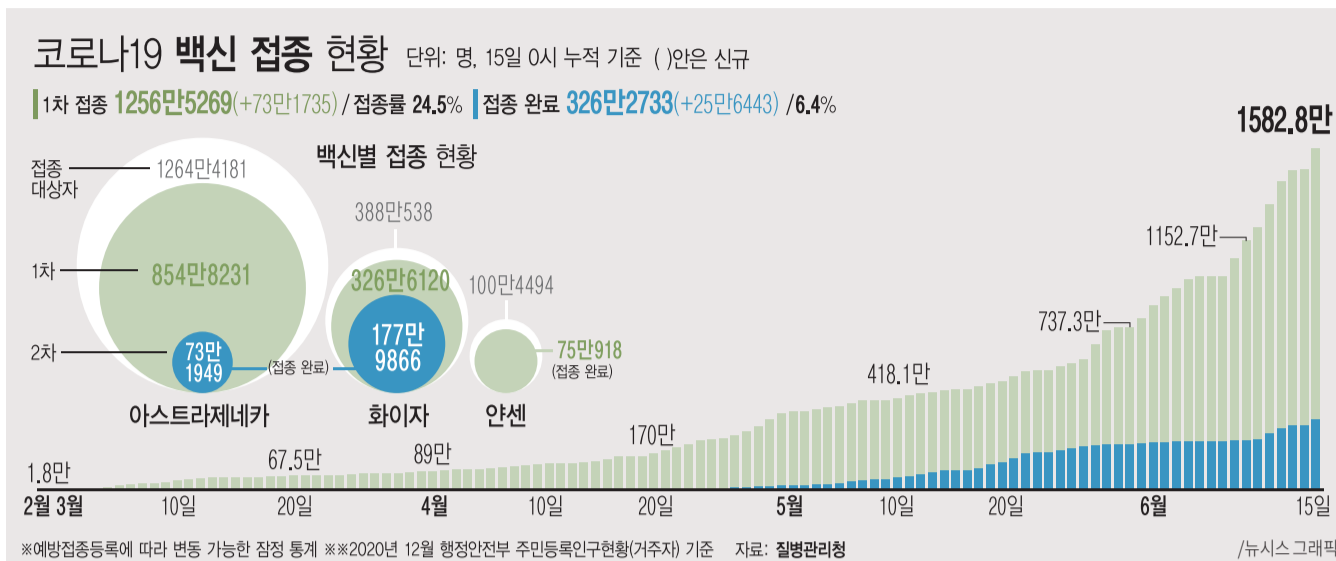
1차접종 완료자 인구 25.3% 해당
2월26일 첫 접종 이후 109일 만
당초 목표보다 보름이나 앞당겨

접종 완료자 326만명, 인구의 6.4%
완료자, 야외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
접종률 90% 고령층, 확진자 하락세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목표가 보름 가량 앞당겨 달성됐다. 정부는 상반기 1차 접종 목표를 1300만명 이상, 최대 1400만명으로 잡은 바 있다. 이미 접종을 마친 연령대의 면역 형성도 가시화되면서, 연내 집단면역 형성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상반기 접종 목표 앞당겼다

15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오후 2시30분 기준으로 1차 접종자가 누적 1300만명을 돌파했다. 전체 인구 25.3%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 2월 26일 첫 접종이 시작된 지 109일만이며, 당초 목표보다 보름 빠르다.



백신별 권장 접종 횟수를 모두 맞은
완료자는 전 인구의 6.4%인 326만2733
명으로 집계됐다.

1, 2차를 맞아야 하는 아스트라제네카는 67.6%(접종 완료율 5.8%)가 1차 접종을 마쳤고, 모두 접종을 마친 사람은 비율은 5.8%다. 화이자 역시 1차 84.2%, 완료자는 45.9%다. 1회 접종으로 면역 형성이 가능한 안센 백신은 대

상자의 74.8%가 접종을 완료했다.

백신 접종자는 7월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방어력이 형성되면 7월부터는 방역 수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면역효과’ 가시화 기대도 커져

이미 접종을 마친 연령대의 면역 형

성도 가시화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6월 둘째주(6~12일) 75세 이상 고령층의 인구 10만명당 확진자는 2.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이 15.8명인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지난 2월26일 전 연령대에서 예방접종을 가장 먼저 시작한 75세 이상 고령

층의 경우, 현재 전체 90%가 예방접종을 마쳤다. 75세 이상 연령층은 4월 셋째 주 인구 10만명당 확진자가 7.9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5월 첫째 주 5.5명, 5월 셋째 주 4.1명, 6월 첫째 주 3.3명으로 가파른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접종 수요가 높아지고, 전체 확진자도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내 집단면역 형성 기대감도 높아졌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75세 이상 고령층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확진자 발생률이 감소하는 추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75세 이하 연령대에서도 예방접종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코로나19 전체 발생 규모는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오는 17일에는 3분기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한다. 3분기 접종 우선순위와 대상자별 접종하게 될 백신 종류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IPO 공모주 청약 중복배정 금지... 무분별 계좌개설 제한

금융위, 관련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크라우드펀딩 기업 발행액도 확대

앞으로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시 중복 배정이 금지된다.

복수의 증권사가 주관하는 IPO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별로 계좌를 개설해 증권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청약 외 업무를 처리하는 고객의 대기시간 또한 길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IPO공모주에 대한 일반 청약자의 중복배정이 제한된다.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청약한 투자자에게 중복 배정을 금지해야 한다.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했다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에 대해서만 배정한다. 예컨대 투

자자A가 동일한 공모주에 대해 B증권사에 청약한 후 C증권사에도 청약했다면, 공모주 배정은 B증권사에서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우리사주조합의 공모주 배정 권리도 단절적으로 개선한다.

기존에는 유가증권시장 IPO 및 공모시 우리사주조합은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의무적으로 배정했다.

앞으로는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 20% 미만으로 배정받는다라는 의사를 서

면으로 표시하면 미달분을 일반청약자나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주식+채권) 발행기업의 연간 발행한도를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한다. 단 채권의 경우 연 15억원을 유지하되 상환 금액만큼 한도가 복원되게 했다.

연초에 15억원을 발행하고 상반기에 5억원을 상환했다면 하반기에 5억원을 추가 발행할 수 있는 셈이다. 이밖에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50% 이상 소유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한다.

자법인 뿐만 아니라 현지법인이 50% 이상 소유한 현지손자법인에 대해서도 신용공여가 가능하며, 현지법인 전체에 대해서는 종투자 자기자본의 40%, 개별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10%까지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모주 중복배정 제한 등 IPO관련 내용은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온·오프라인 창업

창업비용 99만원

200여개 흥삼브랜드 + 2만여개 인기상품

복지물과 웹카다로그를 통해 남녀누구나 평생 판매 수익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사업

25년 역사 브레인TV 방송국 소유 핫터그룹

(주)핫터라이프 T. 070-7204-4515

뿌리·조선업체 44% “아직 준비 안돼”

» 1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서 계속

최근 중기중앙회가 뿌리·조선업체 207곳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 준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4%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답했다. 기업 중 27.5%는 ‘7월 이후에도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밝혀 법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단체들은 입장문을 통해 “50인 이상 기업에 1년 계도기간이 부여된 점을 고려해 대응력이 낮은 50인 미만 기업에는 그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52시간제 시행 후 300인 이상 기업에 6개월간, 50~299인 사업장에 1년간 계도기간을 줬다. 당시에도 준비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단속을 완화하고, 법 위반 시정기간을 늘려줬다.

고용부는 그동안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며 단속보다 계도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다시 법 적용을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5월에도 뿌리·조선업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 관련 설명회를 열어 유연근로제 등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16일 열린 고용부 브리핑에는 주52시간제 관련 보완책이 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유연근로제의 일종인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이 최장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대됐다. 탄력근로제란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일이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인 주 52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업무량 폭증, 돌발 상황 등이 생겼을 때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제’도 기업 대응책 중 하나다.

업체는 추가 인력 채용 시 비용 지원 확대,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자 임금 감소분 보전, 특별연장근로제의 ‘신고제’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